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구조를 바꾸자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노동부의 책임을 묻자!



지난 6월 24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던 경영계는 30원(0.7%)을 인상한 4,350원을 제안했다. 경영계가 일단 동결을 내세우고, 몇 차례의 전원회의의 협상에서 10원, 20원, 30원 인상안을 제출하는 풍경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부에 최종안을 제출해야 하는 날짜인 6월 29일까지 협상이 계속되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를 속에서 결국 공익위원이 제출한 안으로 결정되는 것이 뻔한 시나리오다. 공익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최소인상액'을 제안한다는 사실 자체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노동자 임금평균 50% 법제화의 문제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의 핵심요구로 노동자 임금평균의 50%를 주장해왔다. 또한 최근에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 이를 아예 법으로 만들려는 흐름도 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 임금평균 50%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OECD권고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정규직의 '절반은 되어야 한다',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일 뿐 적절한 원칙이 될 수 없다. 따라서 50% 요구는 실제 쟁취할 목표가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최

고치로서 상징적인 의미에 머물 뿐이다.

더욱이 이러한 입장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시혜적인 시각을 부추긴다. 나의 문제, 모든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일부를 위한 투쟁이기에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다고 여기는 대다수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문제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임금평균 50% 요구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제화가 되더라도 임금격차는 50%로 유지되어 정규직의 '절반'을 벗어날 수 없다.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투쟁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강화하는 최저임금 투쟁이 되려면 50% 법제화 요구에 대한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임금인상은 노동조합이 단결해서 투쟁으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지, '제도적 완결성'을 추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조의 전략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임금인상을 통해 임금격차를 줄여 노동자 단결의 계기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부 책임'이 은폐되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

현재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공익위원의 중재라는 이름에 가려져 있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 최저임금안을 6월 29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이내에 고시하게 된다. 8월 5일 까지 노동계든 경영계든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결정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저임금위원회는 인상액을 심의하는 기구일 뿐, 당해년도 인상분을 최종결정하는 기구는 행정부(고용노동부)다. 즉,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은폐하는 셈이며, 동시에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뒤에 숨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최저임금투쟁을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만이 아니라 도심으로 끌어내기 위해 시도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협상만으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모아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 29일은 투쟁을 끝내는 날이 아니라, 노동부의 책임방기를 폭로하고 새로운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투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이 되기 위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한 때다.

계획된 민주노조 파괴공작

노동자 총단결로 민주노조 사수하자! 7월 2일 유성으로 달려가자!

멈추지 않는 민주노조 파괴공작

2009년 금속노조의 주축 완성차 사업장 중 하나인 쌍용자동차에서 78일간의 점거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계획이 폭력적으로 관철된다. 이어서 2010년부터 금속산별운동의 핵심인 자동차부품사 노동조합들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된다. 노조 간부들에 대한 표적해고가 진행된 창원 대림자동차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탈퇴공작에 창원 두산인프라코어, 두산 DST, 불보건설기계 등이 금속노조를 탈퇴한다. 또한 경주 발레오, 대구 상신브레이크, 구미 KEC 등 지역 핵심 사업장이 공격적 직장폐쇄에 이은 노조파괴공작에 타격을 입었다.

한편 공공부문은 타임오프제 도입과 일방적인 단협 해지, 대규모 징계 및 해고 등으로 많은 노동조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철도본부, 가스공사노조, 발전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도시철도공사노조에 대한 탄압이 이어졌으며, 급기야 2011년에는 지속적인 기획탈퇴공작에 의해 서울지하철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다.

2009년-2011년에 거쳐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운동의 전략적 지역에 탄압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의 공격 대상은 계급적 단결력을 유지

하고 있는 골간 조직인 금속부문 핵심 사업장, 그리고 대형공공기관 노동조합이다. 유성기업 지회에 대한 탄압 역시 정권과 현대-기아차 자본의 공조 하에 진행된 민주노조 파괴공작의 일환이다.

자본과 정권의 준비된 전면전, 이에 걸맞은 노동자운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2년간 진행된 민주노조 파괴는 국가의 공권력과 현대-기아차 등 재벌 자본의 치밀한 공조를 통해 진행되었다. 현재 자본과 정권은 준비된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튼튼한 조직력을 갖춘 노동조합들이 전략적인 탄압에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패배했다. 자본의 전략에 걸맞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조운동의 미래는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현재의 총체적 탄압국면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각자의 생존을 도모하는 수세적·고립적 경향이 커져 총연맹-산별노조 차원의 계급적 단결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저하될 것이다.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는 반격을 시작하자

우선 7월로 예정된 금속노조 임단투를 복수노조 시행으로 더욱 거세질 탄압에 대항하는 전초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유성기업투쟁을 금속노조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국면으로 규정하고, 1차적으로 쟁의권에 돌입할 4만 조합원들의 단결된 파업 투쟁을 조직하자. 구체적으로는 7월 6일 예정된 금속노조 파업 결의대회가 유성기업 및 한진중공업 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 또한 이 흐름을 이어서 7월 중 예정된 금속노조 15만 총력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또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투쟁 연대 흐름인 희망버스 운동, 일상적인 생활고에 시달리는 민중들의 불만을 민주노조 진영이 앞장서서 조직하여, 이를 통해 7-8월 전사회적인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7월 2일(토) 민중의 힘이 주축하는 유성기업투쟁에 총 집결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구조의 정점에 서있는 현대-기아차 자본, 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정권이 사활을 건 유성기업투쟁은 현 시기 핵심적인 계급대립 지점이다. 그들이 전력을 다하는 바로 이곳에서 승리해야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노동자운동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 투쟁전선을 복구하자!

잊지 말자! 한미FTA

한미 FTA 국회 비준이 코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2006~2007년에 타올랐던 한미FTA 반대 물결은 마치 잊혀진 듯 보인다. 이대로라면 한미FTA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지는 강력하다. 6월이 그냥 넘어갔다고 안심할 수 없는 노릇이다. 안전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건 10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야말로 순식간이다.

언제 상정되어도 총력 투쟁할 수 있어야

지금은 비준안 처리 시점이 8월일지 9월일지, 미국 의회는 어찌할지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비준안이 언제 상정되건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는 무너진 FTA 비준 저지 투쟁의 태세를 복구하는 데 모아져야 한다. 8

월까지는 한미FTA 반대투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6년 수준의 비준저지 투쟁전선을 되살릴 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 비준안이 상정되기를 기다리며 여야 협상과정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게다가 한미FTA 원안을 체결했던 민주당을 믿고 있을 수는 없다. 민주당은 말로는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지만, 한EU FTA때처럼 언제 말을 바꿀지 모른다. 우리는 여야협상에 기댈 것이 아니라 힘 있는 대중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국회 일정에 얽매이지 말자!

국회 본회의에 FTA 비준안이 상정되면 여의도 앞에서 투쟁하는 뒤늦은 일회적 투쟁계획만으로는 비준저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비준안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에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며 대중적인 한미FTA 저지 운동들

을 만들어야 한다. 7~8월에 현장에서 크고 작은 교육·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선전·실천사업을 벌여내자.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 분명하게 결판내자!

이명박 정권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명박은 요즘 입만 열면 "한미FTA는 국가 장래를 위한 일"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미래를 위한 투쟁"을 호소해야 할 때이다. 한미FTA 비준저지 투쟁은 단순히 여의도에 한번 모이는 국회 대응 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FTA 저지 투쟁은 과연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를 결판내는 장대한 투쟁이다. 이 나라가 미국제국주의에 의탁한 보수정권과 재벌의 나라가 아니라, 5000만 노동자 민중의 나라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자!